

# 하남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 례안

의안 번호	190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9. 8. .

제출자 : 하 남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법령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위임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를 폐지함

## 3. 폐지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## 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## 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9년 6. 27. ~ 7. 17.(20일)

나. 의견내용 : 의견 없음

## **8. 부서협의 결과**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평가 : 의견없음

## **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**

## **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자연재난과**

하남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  
례안

하남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안전총괄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안전총괄과장 유재영
	팀장 직위·성명	안전협력팀장 전용신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전용신 (031-790-5109)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■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

**제4조(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)**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(이하 “관계행정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·확정(지역·지구·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·인가·승인·면허·결정·지정 등(이하 “허가등”이라 한다)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(이하 “개발계획등”이라 한다)의 확정·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(이하 “재해영향평가등”이라 한다)에 관한 협의(이하 “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
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·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.

1.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
2.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
3.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

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, 재해의 예방·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.

⑦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,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.